

제5차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 공동결의문

1998년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한국 서울에서 열린 제5차 아시아연대회의에 참석한 필리핀, 인도네시아, 대만, 한국, 일본 5개국의 운동관련 단체 참석자들은 “이제, 일본정부의 배상으로 해결을!”이라는 주제로 일본정부의 공식사죄와 배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일본군 '위안부'문제는 명백한 여성인권 침해의 문제이며 국가에 의한 전쟁범죄임을 새삼 확인했다. 이것은 금전적 조치만으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오늘날 여전히 전쟁상황중에서 여성에게 가해지고 있는 국가폭력의 극단적인 형태였으며, 세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조직적인 성노예였다는 점에서, 이 문제의 해결은 세계 여성인권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계기라는 사실을 아시아 여성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했다.

지난 수년간 아시아의 '위안부'피해자의 대부분과 여성, 시민단체들은 일본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설립한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을 반대하여 왔다. 이제 우리는 대만정부가 1997년 12월에, 그리고 한국정부가 1998년 4월에 피해자에게 지원금을 선 지급하기로 한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

이번 연대회의에서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은 운동의 성과를 서로 확인했다.

1.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와 자료의 발굴을 통해 50여 년간 묻혀있던 군 위안부 제도가 역사적 사실임을 밝혀냈다.
2. 오랫동안 고난과 치욕의 세월을 보냈던 피해자들을 물질적, 정신적으로 지원하고 피해자들의 자신감과 자존심을 회복시켰다.
3. 한국과 대만에서는 정부를 움직여 피해자 지원금을 확보하고, 한국은 전범의 입국금지 조치를 끌어내는 등 중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4. 유엔 인권위원회 등에서의 국제활동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문제가 여성에 대한 전쟁범죄라는 관점을 범세계적으로 공유하도록 하는데 기여했다.
5. 보다 구체적으로 피해자와 아시아 각국의 시민단체들은 서로 연대하여 일본정부의 국민기금 지급에 대한 반대운동을 전개해왔다.

그러나 참가자들은 이러한 그동안의 운동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쟁관의 변화, 식민지 청산문제, 성차별 문제, 민족차별 문제 등 해결되지 못한 여러 문제들이 남아있다는 점에도 인식을 공유하였다.

이제 아시아의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공동의 운동성과와 과제를 확인하고, 앞으로도

긴밀하게 연대하며 다음의 공동과제를 수행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1. 일본정부는 유엔인권위원회가 결의한 권고 사항을 이행하도록 촉구한다.
2.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구체적으로 다음 운동을 전개한다.
 - 1)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범죄자 명단을 발굴한다.
 - 2) 아시아의 피해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이 일본 전범의 출입국 금지법안을 만들도록 촉구한다.
 - 3)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촉구한다.
 - 4) 2000년에 개최가 제안되었던 '위안부'에 대한 여성전범법정에 협력한다.
 - 5)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것이다.
3. 일본정부가 법적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사죄와 국가에 의한 개인배상을 실행할 것을 요구하고 일본정부가 국가배상을 회피하기 위해서 만든 '국민기금'의 해산을 요구한다.
4.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진상규명과 국가배상실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이와 같은 결의 하에 피해자와 우리 운동 단체들은 아시아 연대를 더욱 강화해서 21세기를 맞이함에 있어 새로운 결의로 인권과 정의의 실현을 위해 한 단계 높은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굳게 다짐하는 바이다.

1998년 4월 17일

제 5차 아시아연대회의 참가자 일동